

大學 學事運營의 合理化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 史學科)

I

대학의 학사 운영이라면 대체로 대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그들을 평가하여 졸업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킨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대학생의 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의 최고 지성의 집결체일 수밖에 없는 대학은 사회의 감시자로서, 연구의 중추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책임을 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대학은 교육 이상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마련인 것이다. 넓은 뜻에서는 대학의 학사는 이런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일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의 행정 조직이나 운영, 재정, 그리고 교수의 임용과 연구 조직 등 많은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대학생의 입학에서 졸업까지에 관련된 대학의 기능을 좁은 뜻에서 '학사'라는 용어로 불러왔다. 당연히 이런 좁은 의미의 학사는 대학의 다른 모든 부분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주제로 내세운 '대학 학사 운영의 합리화'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다른 조직이 합리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대학이 보다 재정적 독립을 달성해야만 그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학사'를 놓고 몇 가지 생각을 펼쳐 보기로 한다.

한국 대학의 학사 운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1백이 넘는 우리나라의 대학은 각기 '이론상' 서로 다른 특징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각 학교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을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연 이치에 맞지 않는 지금의 대학 입시 제도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일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실시해 온 졸업정원제도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입학과 졸업만이 불합리한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일단 대학의 문에 들어 온 대학생을 교육하는 과정 전체가 불합리하기 짝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학이다. 학과의 구별이나 전공의 부과, 그리고 전공과 교양 과목의 설정 등 일체의 교육과정은 대학생의 장래를 위해 구성되고 운영되기는 커녕 대학 당국의 편의와 교수의 아집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합리적 사고와 행동의 본 고장이어야 할 대학이 불합리한 모든 것의 전시장으로 전락한 현실은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민주화의 과제는

대학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사 운영의 자율화·개방화·다양화 등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결국 학사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앞으로의 과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자.

II

먼저 대학의 정원 제도를 살펴 보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 학생 정원은 나라의 법령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이 세상 어느 다른 나라에 법령으로 국립은 물론 사립대학의 각 학과 정원까지를 규정해 주는 곳이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제도가 참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인 것만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각 대학의 학과 이름과 그 정원이 모두 법령으로 정해지고, 그 변경을 위해서는 문교부 허가를 얻어야 하는 현실은 될 수 있으면 대학생의 정원을 동결하려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과 함께 대학 학사 운영의 근본을 전혀 융통성 없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 부작용은 실로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학과를 세울 필요성을 느낀 대학이 어떤 학과 신설을 원한다 해도 그것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 대학정원령이라는 제도 아래 각 대학은 새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증원'을 신청하는 것이 만성적 관습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 새로운 학과를 세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또 문교부의 입장에서는 학문적 필요와 교육적인 요청보다는 행정적 편의 때문에 대학 정원의 수정에는 소극적이다. 행정적 편의는 또한 새로운 학과보다는 이미 다른 대학에도 있는 학과만을 인정해 주는 경향을 낳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서로 서로 비슷한 학과만을 서로 흉내내듯 벌려 놓게 되었다. 결국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전국의 웬만한 대학에 모두 있는 여러 학과의 전공자는 항상 과잉 생산되는 데 반해서 다른 분야 전공자는 전혀 배출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이런 융통성 없는 정원 제도 때문에 사회적 수요에 맞는 졸업생의 배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직된 학과별 정원 제도의 가장 근본적

인 악영향은 대학교육이 학생들의 요청과는 아랑곳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이어진다.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은 아직 전공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전공 학과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단 입학한 다음에는 아무리 전공을 바꾸고 싶은 학생이 있어도 그저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아예 입시를 다시 거쳐 학과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며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타성에서 비롯된 학사 운영의 경직성은 대학원으로도 그대로 이어진다. 외국의 경우 대학에서 이과를 공부한 학생이 대학원에서는 문과로 바꾸어도 아무 제약이 없건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란 불가능하다. 학문의 세계는 인간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렇게도 또는 저렇게도 나뉘기 마련이다. 물리학이니 화학이니, 또는 사회학이니 심리학이니 하는 구별은 인류 역사상 아주 최근에 생긴 학문 분야임을 우리는 흔히 알고 우리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분야란 끊임없이 재편성되기도 하고, 또 새로 생겨 나기도 하며, 또는 아예 슬그머니 사라져 가기도 하는 것이 정상이라 하겠다. 우리의 대학은 기성의 교수들이 자기 영역을 성역화하여 담을 쌓고 안주하기에는 안성마춤일지 몰라도 새 시대에 적응할 대학생을 그에 맞게 기르는 데에는 전혀 알맞지 않은 기관으로 굳어진 것이다.

지난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총·학장과 기타 관련 교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에 의하면 모든 대학은 정원의 자율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원의 자율화는 3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계열별 또는 대학별 정원을 정해주고 각 대학은 그 범위 안에서 각 학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단계가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그 정원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거나 기존 학과를 폐지하는 것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제 2 단계로는 대학교 또는 대학 전체 정원만을 정해 주면 각 대학교 또는 대학이 그 범위 안에서 학과를 설치하고 각 학과의 정원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제 3 단계로는 각 대학교 또는 대학이 스스로 모집 인원을 책정하는 완전 자율화가 있다.

우리의 여건으로 정원의 완전 자율화란 어려운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학 전체의 정원은 어떤 형태로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문교부보다는 대학교육협의회 같은 기관이 각 대학의 시설과 교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수를 바탕으로 해마다 대학 전체의 정원 조정 작업을 맡으면 될 것이다. 물론 한국 전체 대학의 정원과 자연계의 비율 정도는 정부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대학대로 가능한 한 학과의 정원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유동적 정원제'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전과를 자유롭게 허용하여 학과의 정원을 가령 10명 내지 100명으로 한다면, 인기 없는 학과는 많은 학생을 다른 학과로 뺏기게 될 것이지만 이런 경우 인기 없는 학과에는 장학금 등을 집중하여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기 있는 학과에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논리에서 편입학도 전체 정원 범위 안에서 완전 자율화되어야 할 것이다.

III

1991년부터 우리의 입시 제도는 기부금 입학제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입학제는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꼭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의 기부금 입학제가 용인되기에 이른 것은 그만큼 사립대학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동안 수많은 곡절과 논란을 겪었던 대학 입시 제도는 논술고사의 폐지와 주관식 문제의 출제에까지 제도 수정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근본적인 수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입시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모범 답안도 있을 수 없다. 지금의 전형 방식을 완전히 철폐하여 각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긴다면 고등학교 교육을 망치게 되리라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우려가 일리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대학 입시는 각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

라고 믿는다. 가장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기부금 입학마저 허용되는 형편에 각 대학의 입학 전형 기준을 놓고 극외자들이 완가완부하는 일은 부질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없지 않다.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그 대학의 학생을 선발하거나 그것은 그 대학이 알아서 실시할 일이지 문교부가 뭐라거나 대학교육협의회가 시비할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입시 제도를 완전 자율화할 때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가장 합리적인 모양을 갖춰 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각 대학은 입시 제도를 다른 대학보다 독특하게 만들어 자기 대학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열심일 것이고, 이런 경쟁적인 노력 속에서 한국의 대학 입시는 다양성 속에 가장 바람직한 모양으로 정착해 갈 것이다.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법의 심판이나 여론의 비판으로 해결될 일이지 일률적인 행정 규제로 대학 입시 제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완전 자율화가 불러올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이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각 대학은 입시에서 고등학교의 전 과목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또 현재와 같이 교교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은 어떤 형태로건 신입생 선발에 고등학교의 성적을 참고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서 현재의 학력고사는 그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많은 대학은 학력고사의 성적을 어떤 형태로건 활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본고사를 그만 두고 아예 학력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과목별 비중치를 다르게 적용할지도 모를 일이고, 학력고사 성적은 무시하고 본고사만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입시 제도가 완전 자율화되면 필경 무시험 입학제를 도입하는 대학도 생길 것이 분명하다. 고등학교 성적 몇 % 이내의 학생은 무조건 합격시키겠다는 대학의 우수 학생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학에 따라서는 출신 교교별 입학 후 성적 통계를 바탕으로 교교별 무

시험 합격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도 차차 생기기라고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30년 전의 한국 대학과는 달라 지금 우리의 대학은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대학은 이제 무엇보다도 우선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태세는 갖춰져 있다. 우수 학생의 유치를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쟁이 진행될 때 입시 제도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문제를 주관식으로 내느냐 객관식으로 내느냐, 시험 과목은 무엇 무엇으로 하느냐, 배점은 어떻게 하느냐 등등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의문들은 극히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이다. 대학 입시가 완전 자율화되면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학력고사를 객관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렇다면 각 대학은 간단한 주관식 시험으로 이를 보충하게 될 것이다. 입시는 완전 자율화만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전·후기 시험 문제에는 약간의 통제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지금처럼 전기 대학과 후기 대학 또는 분할 모집을 문교부가 허가할 필요는 없겠으나, 시험 일자룰 3회 정도로 대학교육협의회 또는 문교부에서 지정하고, 대학은 그 가운데 어느 하루 또는 2회에 시험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전기, 중기, 후기 또는 분할 등 각 대학의 재량에 맡기되 시험 날짜단은 지정하여 지나친 혼란을 막아주면 된다.

이 경우 2중 합격이나 3중 합격으로 인한 대학 정원의 미달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두 대학에 합격해 놓고 다시 생각하여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이런 결과로 생기는 결원을 각 대학이 어떻게 보충하는지는 역시 각 대학의 문제로 놓아두면 될 일이다. 후기 시험이 지난 뒤 보컬 모집을 하거나, 수가 적을 경우 기부금 입학을 시키거나 각 대학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IV

대학의 교육과정은 하루 속히 합리적인 수율이 가해져야 할 것 같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40 학점이라거나 하는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각 대학이 규정하고 있는 전공, 부전공, 교양의 학점 지정은 아주 신축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오늘의 한국 대학은 누가 뭐라 해도 이미 엘리트 교육기관이기보다는 대중 교육의 장소로 바뀌고 말았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세계적 추세임을 부인할 수도 없다. 이제 대학은 고도의 학문적 수련을 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중간층을 떠 맡을 교양인을 기르는 곳이 되었다는 말이다.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 기본 구조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않은 채 일제 시대의 찌꺼기를 지켜가고 있다. 아니 그것은 일제의 껍데기가 아니라 미국 제도의 서툰 흉내 때문인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미국에서의 대학원생을 위한 미세한 학과의 분류를 우리는 대학에서 시행하는 것 따위가 그것이다. 우리의 대학은 이제 전공의 교육을 대학원으로 넘겨 주고, 대학의 전공 학점을 대폭 줄여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 꼭 전공의 학점을 줄이지 않더라도 너무 세분화된 분야를 가르치기보다는 대학에서는 좀더 넓은 시야를 기르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전공 교육과정은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오히려 교양 과목에 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특히 현행의 법정 필수 교양 과목은 한국 대학 교육과정의 가장 창피스러운 부분이다.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일반 교양 과목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30%, 즉 42학점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이 시행령에 의하면 교양 과목은 인문·사회·자연과학의 각 계열의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정했고 국민윤리, 한국사, 교련, 체육은 필수로 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당장 시정되는 것이 옳다. 원칙적으로 볼 때 어떤 과목이 가장 교양다운 교양 과목이냐는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차라리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양과정을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가운데 꼭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교련뿐일 것이다. 그러나 교련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규정하는 것도 그렇게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면 특수 과목으로 규정하여 부과한다면 모르되, 교련이 교양 과목이라면 누구라도 머리를 가우뿔할 것이다. ‘교련’과 ‘교양’사이에는 ‘교’자가 공통으로 있다는 것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이 진정 교양 과목이라면 왜 여학생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남학생에게만 부과한단 말인가? 교련을 교양 과목이라 고집하고, 그것을 남학생에게만 가르치는 한 한국 대학은 여성 차별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도적 인격’을 기르는 것이 교양 과목이라면서 거기에 체육을 넣은 것에도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건강은 중요한 것이고, 대학생을 건강하게 도와주기 위한 대학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률적인 체육 과목의 필수 교양화로 그것을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국민윤리와 한국사를 국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동기는 이해할 만하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정확히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바람직한 올바른 인생관이나 국가관이 길러지기는 커녕 비뚤어진 사상과 민족관을 길러주는 온상이 바로 이 과목들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학생에게 부과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은 대개 가장 경험도 적고 나이도 어린 시간 강사에 의해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고등학교까지 이미 이들 과목을 배운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학 1학년에 이 과목이 반복될 경우 대학생들은 대학과 고등학교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뿐이다. 그저 그들이 느끼는 차이가 있다면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더 시시하게 재탕하고 있다는 느낌일 뿐이다.

이 과목들 역시 국채 과목에서 제외시켜 각 대학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국민윤리 대신에는 마르크스-레닌의 사상 비판, 한국의 전통 사상,

북한의 현실 등 여러 과목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이런 과목들 가운데 둘 내지 세 과목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사라는 과목도 일률적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여러 영역 과목을 펼쳐 주고 그 가운데 몇을 반드시 골라 수강하게 하면 된다. 사실은 한국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금의 교양교육에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한국사를 한 과목 들으면 반드시 다른 역사 과목도 한 과목 비율로 고르게 하는 것이 균형 잡힌 한국인상을 기르는 데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국채 과목 이외에도 각 대학은 국어와 자연과학을 거의 일률적으로 교양과목으로 넣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과목 역시 고등학교 교육의 반복을 피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 학습을 위해 여러 과목으로 다양화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자연과학’이란 과목은 있을 수가 없다. 과학사, 과학 철학, 환경학, 생태학, 교양 물리학 등등으로 다양화하고 선택 수강케 한다면 몰라도, 지금처럼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를 백화점처럼 나열해 놓은 교과서를 학교에서 만들어 팔아 놓고 무책임한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따위 교양 과학교육은 대학생들 과학으로부터 멀리하는 데에만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뿐이다.

교양교육의 불합리성은 바로 이 교과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가끔 신문에도 비판의 글이 난 일이 있지만 한국 대학의 교양 교재는 각 대학이 자체 제작하여 모든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좋은 교재도 없지 않지만 대개는 저질이며 낡은 내용이고 값도 비싼 편이다. 게다가 담당 교수나 강사는 그 교재에 따라 충실히 강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 또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교양교육의 불합리이다.

거의 모든 대학은 영어를 필수 교양 과목으로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 2 외국어까지 선택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교양 영어 문제는 우선 영어 실력 검정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는 그냥 학점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불합격자에게만 강의를 부과하면 훨씬 능률적일 것이다. 천

차만별의 신입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영어를 듣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 영어 강의 자체도 다른 교양 과목처럼 다양화하고 학생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다.

V

학사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그 밖에도 많은 것이 고쳐져야 하겠다. 먼저 대학의 재학 연한을 5~6년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재학 연한은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학에 입학한 후 대학 다니는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보여 대학을 그만두었다가 몇 년 뒤 다시 대학 복학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지금은 이런 학생의 재입학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캠퍼스로 돌아 오는 길은 열리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외에도 한 학기에 한 과목씩만 등록하여 30년 동안에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미 몇몇 대학은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문을 사회에 열어 가는 실험에 돌입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확산되리라 전망된다. 지금의 이런 제도는 대학교육과는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대학 졸업생이나 대학을 가지 않은 사회인들에게 대학교육의 맛을 보여 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평생교육에서는 학점 부과는 없이 강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교육은 학점 취득 과정으로도 개발되어, 궁극적으로는 대학생으로 편입할 길을 열어 주거나 아니면 '준학사' 학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학위의 명칭도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학사 학위에는 문학사, 이학사 이외에도 정치학사, 경제학사, 경영학사, 법학사 등이 있다. 이런 방식은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에까지 연장되어 있다. 게다가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철학박사, 역사학박사, 사회학박사, 언어학박사 등등의 명칭을 붙이고 있어서 학위 명칭의 혼란상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식 학위 명칭으로는 학사, 석사, 박

사만을 규정해 주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사회의 관행에 맡겨 두는 편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탄력성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는 복수 전공의 완전 개방을 들 수가 있다. 앞으로 같은 학교 안에서의 전과는 어느 정도 개방되겠지만 전과의 완전 개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또 전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일단 어느 대학이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는 자기 대학의 다른 학과 3학년으로의 편입은 무제한 허용하고,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졸업자의 취직률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복수 전공을 하려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적은 수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학사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그 밖에도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를, 특히 교양 과목과 도구 과목(외국어, 컴퓨터 등) 교육에 활용하고, 그것을 정규 학기 단축에 활용하여 3~3년 반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연구해 볼 과제이다. 또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에 최신의 과학 기술 도구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대학마다 가속화될 것은 확실하다. 다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경비 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이런 합리화 과정은 재정의 합리화 과정에 발맞추어야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 필자가 지적해 본 학사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여러 생각들 가운데에는 필경 비뚤어진 견해와 그릇된 판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컨대 한국 대학의 학사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금과 같은 태울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찾아야 하겠으며, 폐쇄성과 획일성을 집어 던져야겠다는 생각에서 평소의 생각을 적어 보았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한국의 대학은 아직도 학교 편 의와 교수를 중심으로 학사 운영을 해오고 있지, 학생을 위한 학사 운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사 운영의 합리화는 바로 이런 방향으로의 제도 수정을 뜻하게 될 것이다. *